

정통부, 조직구조 혁신 단행

핵심기능 강화한 성과 중심 구조로 개편

정보통신부가 노준형 장관체제 출범 이후 조직체계를 개편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실·국·과 등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성과중심의 탄력적·수평적 조직구조인 본부·팀제로 바꾸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조직은 기존 2실 4국 6관에서 5본부 3단 4관으로 바뀌게 된다.

전체 조직구조의 경우, 계층제적 성격의 실·국 및 과 체제에서 의사결정단계 축소, 권한의 하부위임, 성과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인 본부·단 및 팀 체제로 바뀐다.

특히, 본부·단장은 각각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되, 단업무 중 기보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총괄·조정토록 함으로써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본부와 단간에 독립성(책임성)과 연계성을 조화시킨 조직형태는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사실상 의사결정단계에 있던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폐지하고 '계장'처럼 운용되던 담당사무관과 직원(주무관)을 모두 동등한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의사결정단계를 줄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종전의 직원→담당→과장→(심의관)→실·국장의 4~5단계 결재 단계를 팀원→팀장→본부·단장의 3단계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종전 과장은 3~4급만 보임이 가능했으나, 팀장 보임직급을 5급까지로 확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이나 직급 상향조정은 없으며,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편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 직제 개정령안은 곧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팀 단위 조직을 규정하는 직제시행규칙(부령) 개정 및 후속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급속한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직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조로의 개편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 방침 상 조직 신설이나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방송 융합관련 정책 개발, SW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역량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무검토에 착수해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 3월에 자체안을 확정하고 행자부 요청,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글 양기석 기자

한국DB진흥센터, 사이버베이스와 DB 지식포털 사업 제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KDPC)는 지난달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이버베이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DB 지식포털 사업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사이버베이스는 현재 KDPC가 운영중인 공공 및 민간부문의 DB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DB 지식포털인 'DB가이드닷넷(www.dbguide.net)'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DB가이드닷넷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및 운영자들을 위한 전문 사이트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별 기술자료 및 시장동향을 제공하는 지식라이브러리 및 DB구축운영 가이드, DB온라인 상담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DB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DB온라인 교육 및 기술세미나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3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사이트 방문자수는 약 1만여명 정도다.

4월 4일은 불법복제 거절하는 날

불법복제로 인한 게임산업 손실 500억원 추산

국회와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 불법복제 거절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사(辭寫) 데이'를 선포하며 불법복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4일 조선히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의원, 김재운 의원 및 연예제작자협회, 음악산업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하여 공동 선포식을 가졌다.

사사데이는 발음상 4월 4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종걸 의원은 "불법복제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라며 "한류 열풍 등으로 지적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적권 침해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적권 보호국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산업발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운 의원은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 정보 교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한 뒤 "이러한 온라인 세계에서 불법복제 문제는 창조적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창작 없이 새로운 문화는 없다"고 강조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복제는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저작권자와 창작권자를 보호하여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은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IT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인 32% 이하로 불법복제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영화 산업 손실액은 약 3,000억원, 게임 산업 손실

액 500억원, 소프트웨어 산업 손실액 5,000억원에 이르며,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 시장 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 선언 발표에 참석한 단체들은 사사 데이 선포식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들은 올 하반기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인식조사를 네티즌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반 불법복제 콘서트, 이벤트 및 프로모션, 노인 정보화 교육 등 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글 박현수 기자

포스데이터, 와이브로 시스템 생산 공장 준공

포스데이터가 최근 성남산업단지에서 와이브로 시스템 생산을 위한 '플라이보 디스트리뷰션 센터(FLYVO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했다. 생산공장에서는 기지국 및 제어국 시스템, 테스트용 단말기 등 와이브로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은 월 200대까지 가능하며, 공장에서는 시스템 생산은 물론 완제품에 대한 성능 및 환경 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추진해 온 포스데이터는 이번 생산공장 설립으로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신준일 포스데이터 플라이보사업본부장은 "이번 생산공장 설립은 와이브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서비스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상용화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내는 물론, 동남아,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와이브로가 전세계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문협, 내분 심화로 위기 봉착

법적 공방으로 내달을 듯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심각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문협은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박광식 회장 측과 선거공약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은 대의원들(현 인문협 비상대책위원회)간 공방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는 중앙회장 선거 당시 중간평가를 통해 자신의 진퇴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박광식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고 총회장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총회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들이 박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긴급발의해 출석한 대의원 233명 중 찬성 13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해임결의(안)를 통과시켰다는 것.

이후 비상대책위에서는 박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박 회장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특히 박 회장은 퇴임거부와 함께 홈페이지 폐쇄, 일부 지역 임원의 해임(안)을 상정한 이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협회는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5일부터 중앙회 행정력을 확보하고 다음날인 6일 오후에는 긴급 이사회의를 통해 향후 협회 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임시총회 개최, 신임 중앙회장 선거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중앙회 업무 정상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진우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문제로 어떠한 형태로든 회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중앙회 업무가 정상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회원의 언론인 홈페이지를 다시 개방하고, 정관규정에 따라 올 상반기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 새로운 IPCA를

이끌 중앙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이미 중앙회장 해임결의 건에 대해서 복수의 범법범인에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고 박 회장을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총회 결의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박 회장 측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이번 IPCA 사태는 게임업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오며 이익집단으로 자리잡은 IPCA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멀게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불매 운동에서 시작해 가깝게는 PC방 완전금연 반대와 넥슨 불매운동에 이르기까지 PC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조직력을 과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편 인문협 비상대책위는 중앙회장 대행으로 김진우 경기남부 지부장을 선임했고, 3개월 내에 보궐선거로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협회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글 양기석 기자

